

#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 제 4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 먼저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반드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야 합니다.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선택 과목,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법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선 답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법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은 행동의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에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준다. 그러나 누군가 행동의 기준을 깨뜨릴 때, 개인과 공동체는 분쟁과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법은 개인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일정한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보기 >

- ㄱ.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 ㄴ. 법의 제·개정이 쉽도록 해야 한다.
- ㄷ. 과거 행위에 관한 안전 확보와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
- ㄹ.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라는 법언(法諺)과 관련이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 다음 헌법 조항을 구체화한 법률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

- ① 현대 복지국가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 ②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③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부인하는 법률들이다.
- ④ 노사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 ⑤ 최저 빈곤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된다.

3. 다음은 (가)의 법 규정에 대해 (나)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가),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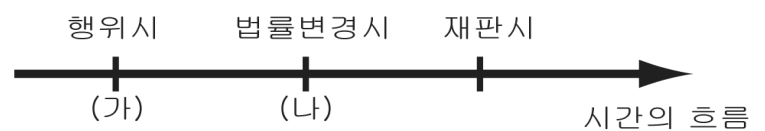
- (가)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5·18광주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 (나)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특별법을 제정하여 박탈하는 소급입법은...(중략)...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헌재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병합]결정).

< 보기 >

- 갑: (가)의 법 규정은 개인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 을: (가)에서의 공소시효 정지는 법치국가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 병: (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소급입법을 허용하고 있어.
- 정: (나)는 정의의 이념이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 ① 갑, 을                      ② 을, 정                      ③ 병, 정
- ④ 갑, 을, 병                ⑤ 갑, 병, 정

4. 법원이 (가), (나) 시점의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시 내릴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단, 형사사건에 한정한다) [3점]



< 보기 >

- ㄱ. (가)시점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나)시점에서 변경되면, 재판시에 (나)시점의 법률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ㄴ. (가)시점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나)시점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면, 재판시에 (나)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 ㄷ. (가)시점의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나)시점에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면, 재판시에 (가)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 2

## 사회탐구 영역(법과사회)

5.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갑 : 법치주의는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야.  
을 : 그럼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 통치는 모두 정당한 것이 될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소수의 의사가 반영된 법을 제정하고 법치주의를 주장한 독일의 나치 정권이나 우리 나라의 유신 정권을 정당성이 있는 정권으로 보아야 하는 거야?  
갑 :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예를 들면 \_\_\_\_\_ (가)

〈 보기 〉

ㄱ. 국가권력을 각 기능에 맞게 분리시켜 통제하고 있어.  
ㄴ. 헌법재판을 통해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심사하고 있어.  
ㄷ.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통해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고 있어.  
ㄹ. 행정 분쟁의 최종결정은 행정전문기관인 상급관청이 담당토록 하고 있어.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6. 밑줄 친 '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 요즘 언론에서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에 대해 많이 다루던데 그게 뭐지?  
을 : 그동안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해 왔는데, 이번에는 건물만 따로 분양해서 가격을 낮추어 공급하겠다는 거야.  
갑 : 그렇다면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다른 거잖아? 만약 토지소유자가 토지매수를 요구하며 건물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이 원칙에 반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을 :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일반인에게 분양하기 때문이야.

- ① 사적 자치 및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평은 공연하게 유지되어 온 법적 생활 상태를 보호한다.  
③ 과거의 행위가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한다.  
⑤ 권리가 본래의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행사되는 경우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7. 밑줄 친 '이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대학생 갑(만20세)은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 을(만18세)을 데리고 모 주점에 들어가 술을 시켰다. 주점의 종업원 병은 자신이 판매하는 술을 을도 마실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갑에게만 술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을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병은 청소년에 대해 술판매를 금지한 법(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을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으나, 동법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이므로 이 해석을 금지한 원칙에 반한다고 법원은 판시하였다.

\*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청소년보호법 제 51조 제8호).

〈 보기 〉

ㄱ. 문언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해석이다.  
ㄴ. 형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히 제한한다.  
ㄷ.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상당한 재산이 있는 을과 혼인하였다. 어느 날 퇴근을 하던 남편 을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병의 차에 치어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갑은 태아 정을 임신 중이었다.

- ① 정이 사산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② 정이 출생한 경우 갑을 통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정은 상속 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정이 모체에서 일부 분리되었을 때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⑤ 정은 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9. (가), (나)는 사망의 시기에 관한 서로 다른 법적 견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사람의 신체 가운데 심장의 박동이 완전히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나) 사람의 신체 가운데 뇌가 손상되어 뇌파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정지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① (가)의 경우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가)의 경우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완전히 소멸된다.  
③ (나)는 장기 이식 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④ (나)는 (가)보다 사망의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  
⑤ (나)는 (가)보다 사망 시기를 일정 기간 앞당긴 것이다.

10. 다음은 수업 시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학생 : 선생님.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교사 : 그 말은 법학자 ○○○의 유명한 법언(法諺)이에요. 법은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는 말임과 동시에, 모든 도덕이 곧 법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학생 : 모든 도덕이 곧 법일 수 없나요? 법이 도덕과 분리될 수 없다면 모든 도덕이 곧 법이어야 하지 않나요?  
 교사 : 꼭 그렇지는 않지요. 법이 도덕의 반영물이긴 하지만, 모든 도덕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도덕이 법이 되는 현상을 '법의 도덕화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볼까요?  
 학생 : \_\_\_\_\_ (가)

< 보기 >

ㄱ. 인간의 자율적 판단영역이 국가에 의해 침해될 수도 있어요.  
 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ㄷ. 반인륜적 행위는 도덕적 비난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1. 밑줄 친 ㉠, ㉡의 공통된 성격으로 옳은 것은?

○ 미성년자인 갑은 부모님 동의 없이 중고 노트북을 5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곧 후회하고 ㉠취소권을 행사하였다.  
 ○ 한정치산자인 갑이 자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하려는 계약에 대해, 갑의 후견인 병은 ㉡동의권을 행사하였다.

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  
 ②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③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응한다.  
 ④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⑤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판매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1998년 3월부터 신고 없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를 무단 변경(행위완료)하여 건축법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999년 2월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판매시설이나 유흥주점이 같은 시설군에 속하게 되면서, 이들 사이의 용도변경은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다.

① 갑의 재판은 신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갑은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하면 무죄이다.  
 ③ 이 경우 신법의 소급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이 경우 구법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⑤ 갑의 행위가 법률 변경시에 완료될 경우 신법이 행위시 법이 된다.

13. 다음은 어떤 판결문의 서로 다른 의견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가) 자연법상의 권리로서 소위 저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주장)할 수 없다.  
 (나) 민주헌법 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국민 대다수에 의하여 판단되는 경우, 저항권은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헌법 질서 보호의 최후수단으로서 이를 자연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보기 >

ㄱ. (가)는 실정법의 우위를 선언하고 있다.  
 ㄴ. (가)는 (나)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다.  
 ㄷ. (나)는 보편적이고 타당한 법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ㄹ. (나)는 법 형식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4. 다음 사례에서 '갑'이 직접 침해받은 권리는?

갑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다. 유치장의 화장실 문은 하반신만 가리도록 되어 있어, 신체부위가 일부 노출되는 상황에서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갑은 용변을 볼 때마다 심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고 생리적 욕구까지도 억제해야 했으며, 다른 사람이 용변을 볼 때는 역겨움을 참아야만 했다. 이후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갑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① 사회권      ② 신분권  
 ③ 인격권      ④ 청구권  
 ⑤ 평등권

15. 다음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만 35세)은 동네 주민과 함께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계약서에 날인하고,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의 가족들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갑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 결과 갑은 지능지수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간단한 셈도 불가능하며 이런 상황은 어릴 때부터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감정결과를 이유로 갑의 가족들은 갑과 은행과의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갑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효 판결을 내렸다.

① 갑은 행위능력이 없다.  
 ② 갑은 의사능력이 없다.  
 ③ 갑은 의사능력과 권리능력이 없다.  
 ④ 갑은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다.  
 ⑤ 갑은 의사능력은 없으나 행위능력이 있다.

16.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못하며,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는 이 제도를 통해 일정한 경우, 법적으로 마치 사람처럼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가능하다.
- ③ 혼인, 유언과 같은 자연인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관청에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권리능력이 발생한다.
- ⑤ 모든 법률관계에서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금치산자인 갑(만 30세)은 악기점 주인인 을과 바이올린을 500만원에 계약하였다. 이후 갑은 을을 찾아가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있으나 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① 갑의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 ② 갑의 행위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 ③ 갑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다.
- ④ 을은 갑의 부모에게 계약의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 ⑤ 을은 갑 또는 갑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8.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3점]

의사능력 유무의 판정이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때 그때 정해지게 되면 다음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의사 표시자가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매번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입증되었다더라도 그 행위자와 법률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은 일정한 정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경우를 유형화 시킨 이 제도를 규정하게 되었다.

< 보기 >

ㄱ. 법원의 일정한 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ㄴ.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는다.  
 ㄷ. 사회적 합의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을 객관화 한 것이다.  
 ㄹ. 의사능력은 있지만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자들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만18세)은 을과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 1년 후 갑의 아버지는 갑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으나, 행정기관은 갑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미성년자'로 구분하여 세금 공제액이 많은 성년자인 경우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갑은 행정기관이 자신을 성년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이의 제기를 하였다.

- ① 갑은 이혼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이다.
- ② 갑은 이혼 후에도 성년이므로 행정기관의 처분은 부적법하다.
- ③ 갑에 대한 성년의제는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④ 갑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행정기관은 갑을 성년자로 보았을 것이다.
- ⑤ 갑이 이혼 후 증여받은 재산은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하다.

20. 다음 상황에서 갑에게 요구되는 법치사회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계약해제 통고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에 걸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같은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재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법률상 이유 없는 청구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여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재심: 확정판결에 대하여 주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제도

< 보기 >

ㄱ.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다.  
 ㄴ. 권리 자체의 사회성과 공공성을 인정한다.  
 ㄷ. 사법부의 판단과 사회의 법질서를 존중한다.  
 ㄹ. 권리를 행사할 때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